

# CEO Information

2007.1.3 (제585호)

## 2007년 국내 10대 트렌드

### 목차

1.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
2. 경기부진 속에 低투자·低고용 지속
3.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4.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5. 기술경쟁력 G7 국가 진입
6. 산별 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7.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 가중
8. 사회전반의 안전회구 성향 강화
9.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10.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증

작성 : 한창수 수석연구원(3780-8188)  
hcs001@seri.org  
권순우, 동용승, 이정일 수석 외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3780-8100)  
sericmk@seri.org

## 《 요약 》

한국의 2007년은 ‘우려’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경기부진 속에 저투자·저고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이면서 2006년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원화 강세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압박이 가중’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완수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이해관계자의 全方位 압력이 증대되어 이미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영행태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 고령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전반의 안전회구 성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진취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은 역동적인 인재가 견인해온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안전회구 심리는 시장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실리를 추구하는 합리적·보수적 소비행태를 자극할 것이다.

散在한 리스크 요인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복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한반도의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책 당국은 ‘과잉유동성 축소’를 위해 강력한 유동성 조절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가계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의 산별전환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점 역시 큰 리스크 요인이다. 또한 ‘大選을 향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면서 각종 사회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선행할 경우 정책일관성 유지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희망적인 전망은 있다. 환율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기는 하지만 내년 중 한국이 12년에 걸친 ‘魔의 만 달러 시대’를 마감하고 ‘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다. 원화 가치 상승 역시 한국의 높아진 경쟁력을 반영하므로, 후발 개도국의 선두 주자로서 2만 달러의 벽을 돌파하는 것은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선 한국의 저력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노력에 힘입어 ‘기술경쟁력 G7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국의 성취는 과거의 역동적인 경제활동과 투자에 기반한다. 이제 과거의 성공 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도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리스크 요인이 산적하여 있으므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2006년 트렌드 예측과 실제 상황 》

□ 당 연구소의 2006년 트렌드 예측과 실제 전개된 상황은 대체로 일치

- 수출이 4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달성하며 수출 3천억 달러시대 개막
  -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0.9%p 상승하였으나 본격적인 경제성장세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
- 직접금융시장의 변화, 국내시장 경쟁 격화, 시험대에 오른 한류, 선거와 사회갈등 심화 등은 대체로 적중
  - '인터넷의 진화'는 UCC 등이 확산되었으나 일부 신서비스 확산 지체
- 북핵 문제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 발생

2006년 국내 10대 트렌드와 실제 상황

구분	트렌드 예측	2006년 실제 상황	평가
경제 일반	수출 3천억 달러 시대 개막	- 수출 3,200억 달러 상회 - 수출규모 세계 11위권 진입	○
	소비 회복 가시화	- 소비 증가율 전년보다 0.9%p 상승 - 하반기 소비 회복세 약화	△
	전기를 맞이하는 직접금융시장	-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 - 자금중개기능은 여전히 취약	○
산업 경영	인터넷의 진화	- 동영상/이용자참여콘텐츠(UCC) 본격화 - 와이브로 등의 서비스는 확산 지체	△
	줄기세포 파문의 여진	- 배아줄기세포 연구 중단,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속 - 바이오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	△
	국내시장 경쟁 격화	- 중국기업과의 가격경쟁 격화 - 이업종 간 경쟁심화	○
사회 문화	노동인력 고령화와 대책 모색	- 정년 연장,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 요구 증가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수는 정체	△
	시험대에 오른 한류	- 개도국의 자국 문화산업 육성 강화 - 각국의 문화다양성 요구 증가	○
정치	선거정국과 사회갈등 심화	- 지방선거 경쟁격화, 경쟁적 발전공약 제시 - 대형분쟁(미군기지 이전, 반FTA 시위)	○
	북핵문제 난기류 지속	-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으로 위기 고조 - 6자회담 성과 미흡	△

주: ○는 전망과 실제상황 일치, △는 일치했으나 정도에 차이, ×는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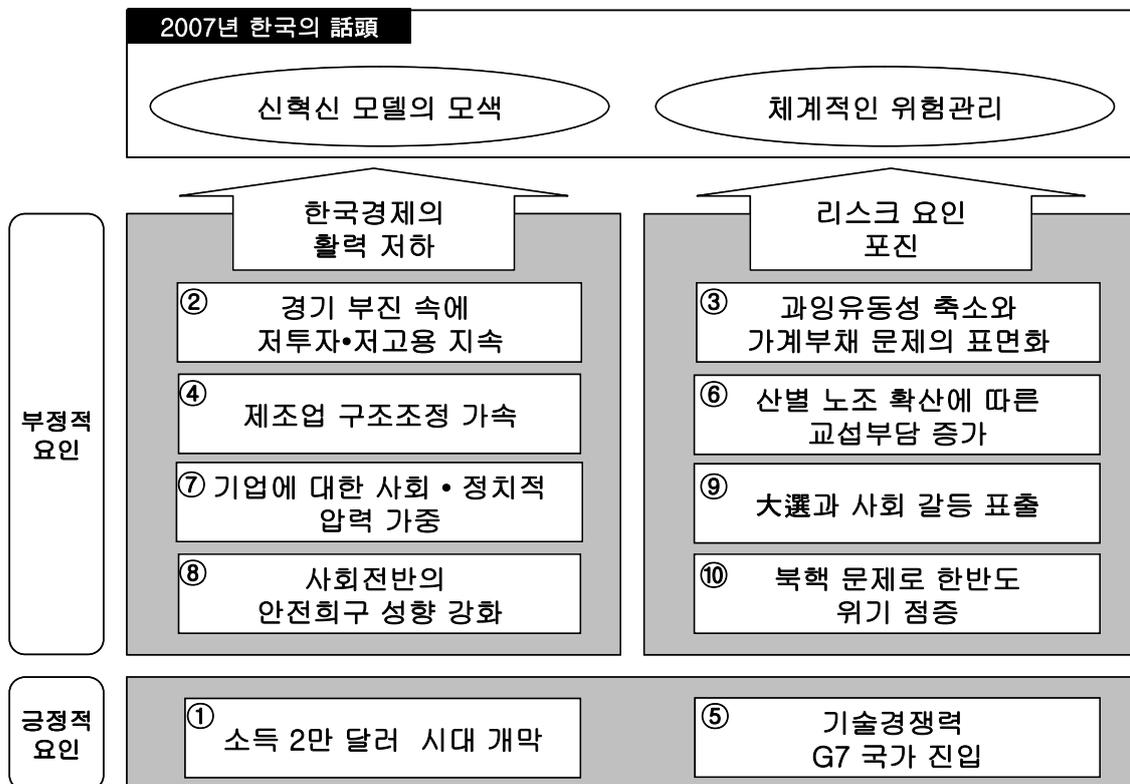
## 《 2007년 국내 10대 트렌드 》

- 2007년 한국경제는 경기부진 속에 수출 및 환율효과에 힘입어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전망
  - 200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이며 작년(5.0%)<sup>1)</sup>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
    -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대형 M&A 추진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전
  - 2007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12년만에 2만 달러 수준에 도달
    -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와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7대 기술강국으로 부상
  
- 기업과 개인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2007년에도 지속
  -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低투자·低고용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이 가중되어 경영의 보수화 경향 지속
  - '안전을 희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진취적인 시도 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일 자리를 선호하는 풍조가 확산
  
-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布陣
  - 과잉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어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될 우려
  - 산별 노조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교섭부담이 증가하고 노사분규 증가 등 노동환경이 악화될 가능성

<sup>1)</sup> 정부 추정치

- 기업의 교섭 부담 증가는 보수적 경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 갈등이 첨예화되고 정책 현안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경제에 악영향
  -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보 리스크 점증
- 2007년은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新혁신 모델을 모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해
- 한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구조조정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
  -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혁신 노력이 절실
  - 산재한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 돌출 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

2007년 국내 10대 트렌드



주: 번호는 10대 트렌드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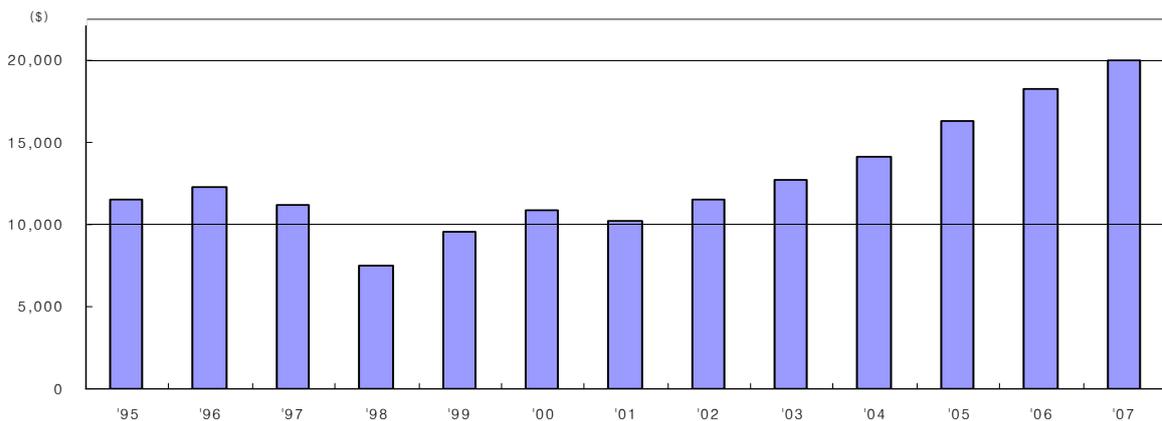
## 1.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

### 저성장 속의 2만 달러 시대 개막

□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12년만에 2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외환위기 등 경제적 난관 속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선진국 평균(9.2년)보다 긴 '魔의 만 달러 시대'를 경험
- 선진국도 1만 달러 달성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개도국 중 2만 달러의 벽을 돌파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

1인당 국민소득 추이



주 1: 2006년과 2007년은 추정치

2: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은 20,015\$(연평균환율 906원/\$를 가정)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의료, 교육, 생활수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
- 인간개발지수(HDI)<sup>2)</sup> 추이: 0.86('95년) → 0.89('00년) → 0.91('04년)

<sup>2)</sup> 기대수명, 진학률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OECD 평균 소득수준의 55%에 불과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2005년도 기준으로 세계 30위에 해당<sup>3)</sup>

## 소득 2만 달러의 虛와 實

□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상당부분 원화가치 상승 효과에 기인

- 2000년 이후 소득증가 중 환율하락으로 인한 부분이 전체의 36%를 차지
-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83.8% 증가했으며 이 중 실질소득의 증가분이 38.0%p, 환율이 30.5%p, 물가가 15.3%p
- 환율과 물가를 제외한 실질소득의 기여분은 45%에 해당

요인별 1인당 국민소득 증가 기여도

	1인당 소득증가율(%)	기여도(%p)		
		실질소득	환율	물가
1995~2000	-5.1	16.8	-37.3	15.4
2000~2007	83.8	38.0	30.5	15.3

자료: 한국은행 Ecos DB, 통계청 Kosis DB

□ 그러나 환율 하락이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의한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수출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이 환율 하락(원화 가치의 상승)을 유발
- IT분야의 반도체와 휴대폰, 전통산업분야의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세계 1류 품질 경쟁력을 유지
- 일본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까지는 달러당 300엔에 이르던 환율이 100엔대로 하락하는 환율효과가 크게 작용

<sup>3)</sup>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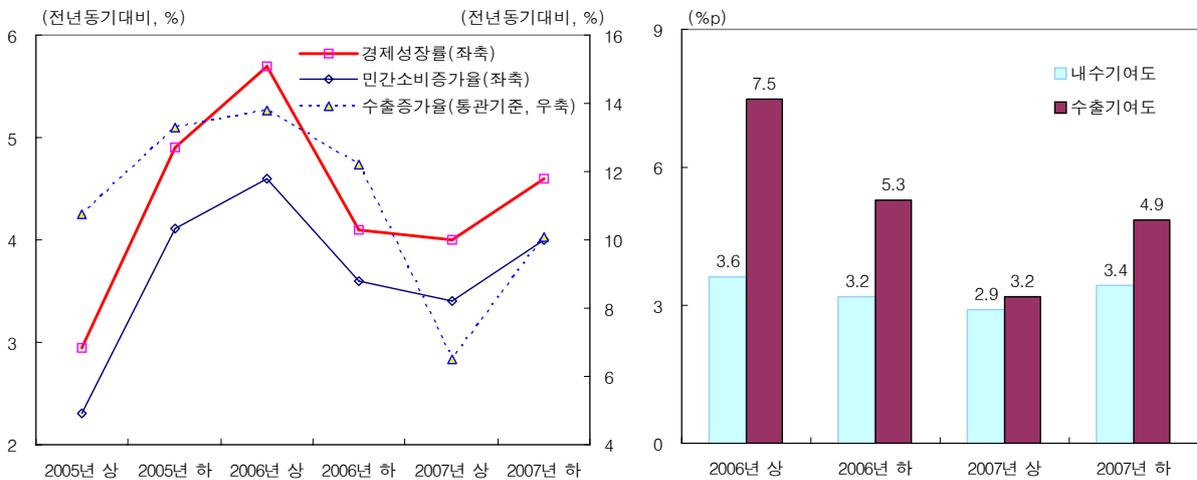
## 2. 경기부진 속에 低투자·低고용 지속

### 수출 주도하에 上低下高 성장 흐름

□ 2007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전년(5.0%)보다 낮은 4.3%에 그칠 전망

-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上低下高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세계 IT경기의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회복하고 고유가 기조의 완화로 소비 부진도 완만하게 개선
- 2007년 반기별 경제성장률: 4.0%(상반기) → 4.6%(하반기)
-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하반기 모두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상회해 수출 주도형 성장패턴이 지속

반기별 경제성장률 및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주 1: 내수는 재고를 제외, 2006년 하반기 이후는 전망치  
 주 2: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 합과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수입과 재고의 성장기여도

□ 저성장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경영환경도 악화되어 투자 증가세를 제약

- 2007년의 일자리 창출수준은 28만 명 내외에 그쳐 예년의 30만 명 수준을 하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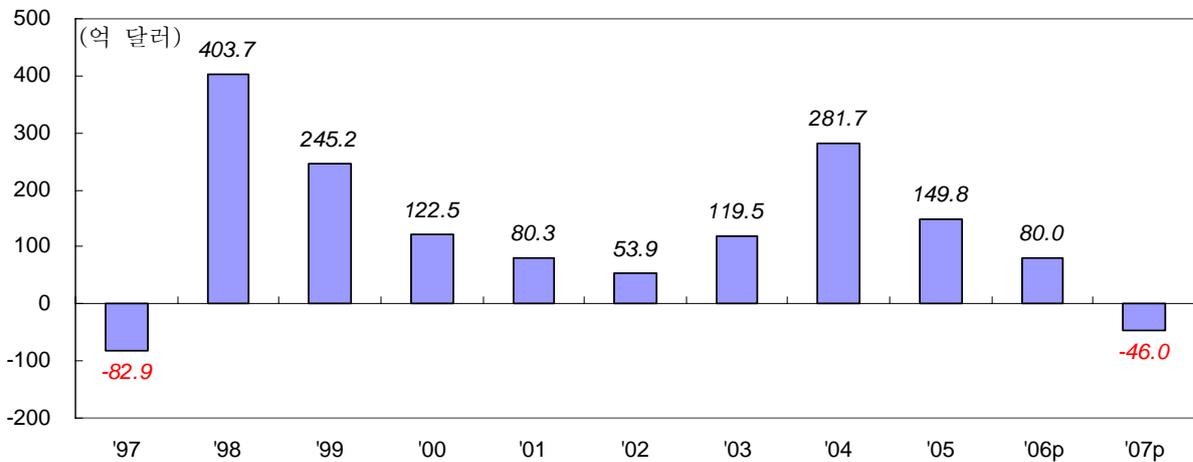
-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수익성 악화, 수출 둔화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7.4%) 수준을 하회하는 5.7% 예상

##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

□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9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저평가된 원화와 세계경제의 호황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추이



주: 2006년과 2007년은 전망 자료 /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 2007년에는 경상수지가 소폭이나마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 상존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
  - 수출의 한 자리수 증가(8.4%)로 상품수지 흑자는 2006년보다 100억 달러 이상 적은 172억 달러로 예상<sup>4)</sup>
-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사상 최고치인 187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상품수지 흑자를 초과하는 서비스와 소득수지 등의 적자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

<sup>4)</sup> 2006년 1~11월 중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72.6억 달러로, 연간으로는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됨

### 3.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의 표면화

#### 강도 높은 유동성 조절정책 시행

□ 2007년 중에 지난해의 유동성조절정책<sup>5)</sup>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잉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지급준비율 인상 효과가 연중 시차를 두고 발생
  - 2006년 12월 23일부터 원화 요구불예금 및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인상
- 외화차입 억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직접적인 유동성관리 정책의 효과도 발생
  - 2006년에는 낮은 금리의 외화차입 자금이 대규모로 국내로 유입된 결과 국내금리 인상의 유동성 축소 효과가 반감
  - 금융기관 스스로도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 부동산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유동성축소 정책이 나올 가능성
  - 대출총량 규제, 콜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를 실행

□ 2007년 중에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과잉유동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 2005년 3/4분기에 19.2%까지 확대됐던 과잉유동성 정도<sup>6)</sup>가 2006년 3/4분기 말에는 8.8% 수준까지 축소된 상태

<sup>5)</sup> 과잉유동성 축소정책이 2006년까지는 금리인상이라는 간접적인 유동성조절 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에는 직접적인 유동성조절 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sup>6)</sup> 과잉유동성 정도는 경제규모를 감안한 통화량의 장기추세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로 측정

## 가계부채 문제 표면화

- 2002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
  - 2002년에서 2006년 11월까지 중 주택담보대출이 127.6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180.1조원의 70.8%에 해당

###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단위: 조원, 전년말 대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2~06년
가계대출 증가액	61.6	30.6	22.5	29.4	36.0	180.1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5.5	21.3	16.4	20.5	23.9	127.6

주: 2006년은 11월까지의 증가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각 월호

-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과잉유동성 축소정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
  -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 가계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시장금리가 단기간에 급등<sup>7)</sup>하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
    - 추가대출 제약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계 유동성이 악화되고 소비활동도 크게 위축
  -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가계 및 금융부실로 확대될 우려
    - 가계대출의 62.7%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직결

<sup>7)</sup> 2006년 11월 23일 지급준비율 인상을 시작으로 일련의 직접적 유동성조절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 1개월 만에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AA- 기준)가 0.4%p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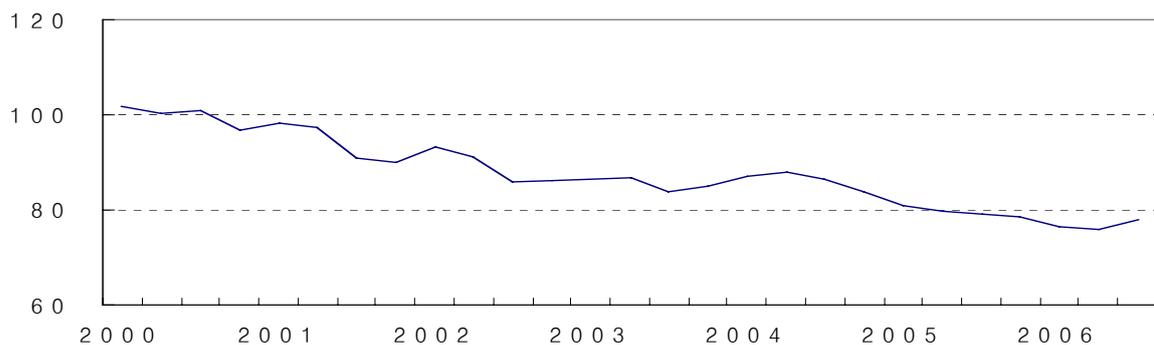
## 4.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 어려움이 가중되는 제조업

□ 2007년에도 원화 강세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기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

-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sup>8)</sup> 보이고 있는 수출채산성 악화가 2007년에도 계속
  - 특히 개도국의 저가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중견·중소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

수출채산성 추이 (2000년 =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내수시장 부진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재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예상
  -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2006년 1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sup>9)</sup>

### 난국 돌파를 위한 노력 전개

□ 최적 생산지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

<sup>8)</sup> 수출 채산성은 한국 기업이 수출 단위당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서 수출가격에서 수출비용(생산비)를 차감한 값. 수출비용은 국산자재비, 수입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으로 구성되며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계산됨.(한국무역협회, "2006년 3/4분기 수출채산성 변동추이", 2006.12)

<sup>9)</sup>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 각 호

- 국내 제조업의 신설법인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제조업 신설법인수(개사): 12,445('03년) → 10,178('04년) → 9,435('05) → 7,666개('06년 11월)<sup>10)</sup>
-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생산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주요 해외 투자 계획

기업명	투자지역 및 내용	규모
현대자동차	중국과 인도의 제2공장	35억 달러(2007년까지)
포스코	인도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및 광산	50억 달러(2010년까지)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	7,000억 원(2016년까지)

자료: 보도자료 종합

####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전개

- 세계 시장의 과점화 현상에 대응하고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내 기업도 전략적 차원의 M&A를 적극 추진
  - 현대, SK, GS, 한화 등 많은 그룹에서 M&A 전담팀을 상설화
-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상당수 대기업이 매물로 나와 국내 기업간 대규모 인수합병을 촉발할 전망

#### 매각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기업명	인수 참여 거론기업	인수가(예상)	매각 시기(예상)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그룹, 두산그룹	4~6조원	2007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3~4조원	2007년 상반기
하이닉스	LG그룹, 채권단 지분 유지	7조원	2007년 이후
대한통운	STX, 금호그룹, CJ	1.5~2조원	2007년 상반기
만도	한라건설, 현대자동차	0.8~1조원	2007년 이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7」, 2006.12.

<sup>10)</sup> 한국은행·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각 호

## 5. 기술경쟁력 G7 국가 진입

###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한국은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이미 세계 7위 수준의 기술강국으로 부상

- 국가 R&D 투자는 2005년 기준 24조원으로 이미 세계 7위를 기록
  - 중국을 포함한 순위이며, OECD 기준으로는 6위

- 미국에 등록된 연간 국제특허는 2002년 2,552건에서 2005년 4,388건으로 급증하며 세계 5위를 기록

□ 2005년 기준 세계 8위였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2007년 중 7위권 진입이 가능

- SCI 게재 논문증가율, 연구개발비 증가율, 국제특허 출원 증가율 등 각종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sup>11)</sup>

- 미래기술 분야에서 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추세
  - 최고 수준 대비 평균 기술격차 : 1998년 5년 → 2005년 3년<sup>12)</sup>

#### 기술경쟁력 주요 항목별 국가순위('04~'05년 기준)

지표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한국	세부항목
기술수준	1	2	3	4	5	6	7	8	생산기술 수준, 미래기술수준
투자수준	1	2	3	7	8	4	5	6	연간 R&D투자액, GDP대비 비중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 200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INSEAD,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5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순위를 계산

<sup>11)</sup>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문 투입과 성과지표 국제비교", 2006

<sup>12)</sup>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제2회(1998) 및 제3회(2005)

### 3대 불균형 해소가 기술 G7 안착의 조건

□ 기술 강국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 투자부족, 혁신역량 편중, 연구 개발성과 활용 미흡 등 3대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

#### 기술경쟁력 3대 불균형 및 당면과제

3대 불균형	불균형 내용	당면 과제
기초 vs 응용	미래대비 기초연구 부족	- 공공부문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
혁신역량 분포	혁신역량이 대기업 및 일부 대학에 집중	- 혁신적 기술기업군 육성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창출 vs 활용	창출된 성과의 활용이 미흡	-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촉진 - 전문서비스, 모험자본 등 인프라 강화

- 응용기술 중심의 투자에 치중하여 미래에 대비한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
  - 국가 총 R&D지출 중 기초연구 비중('04년): 한국 14%, 미국 19%<sup>13)</sup>
  - 미국은 '인지과학' 등 기초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혁신역량이 대기업 및 소수 대학에 집중
  - 선두 5개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 : 한국 42%('05), 미국 13%('03)
  - 세계 100대 이공계 대학('06년 타임誌 선정) : 한국은 2개
- 산학연계가 취약하여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이 미진<sup>14)</sup>

#### 美 베이-돌(Bayh-Dole) 法 : 공공연구성과의 활용촉진

- ▷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R&D 성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 제정
  - 연방정부에 귀속하던 연구성과를 해당 연구기관에 귀속시킴
  - 해당 연구기관은 2년 이내에 상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진할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통해 타 기관·기업에게 해당기술의 사용권을 제공
- ▷ 법 제정 이후 대학·공공연구소를 기반으로 지식기반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
  - 1970년대까지 연방정부의 특허 2만 8천건 중 민간에 이전된 것은 5% 이하
  - 기술창업·스핀오프 등이 활성화 되면서 현재의 BT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

<sup>13)</sup>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4

<sup>14)</sup>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비율('05년) : 한국 21%, 미국 2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2006.8.24)

## 6. 산별 노조 확산에 따른 교섭부담 증가

### 본격적인 산별 노조 시대 도래

#### □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 2006년 6~7월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등 대규모 노조의 전환을 기점으로 산별 노조가 활성화
- 2006년 12월 현재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78%가 산별 노조의 조합원<sup>15)</sup>
- 노동계는 신자유주의의 확산, 낮은 조직률, 사회적 공공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노조 전환을 적극 추진

#### □ 산별 노조란 동종 산업 내 모든 근로자를 직접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조

- 산별 노조는 교섭권과 파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산하 조직에 대한 통제 및 재정 운영권을 보유
- 기존 기업별 노조는 지부 및 지회로 전환되어 조합비 징수나 기업별 교섭을 담당하는 대리(하부)기관으로 기능

#### 노조 조직형태별 특성 비교

구분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성격	- 개별 기업별 단일조직 - 산별 연맹+기업별 노조	- 중앙집권적 단일조직 - 산별 단위노조+기업별 지부(지회)
조합원 범위	- 특정 기업 소속근로자 - 정규 종업원이 일반적	- 산업 내 모든 근로자 - 실업자, 비정규직 가능
단체 교섭	- 기업단위 단일교섭 - 근로조건 개선 위주	- 산별 노조 자체가 교섭당사자 - 정치,제도 교섭요구 포함
단체 행동	- 연맹은 파업 지원만 수행 - 동맹파업은 불법	- 산별 노조가 파업을 주도 - 동맹파업, 기업 내 파업 모두 가능

<sup>15)</sup>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 노사갈등 및 교섭 혼란이 불가피

### □ 노사관계 주체가 산별 노조로 바뀜에 따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 교섭사항이 확대되고, 기업경쟁력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가 성행할 우려
  - 근로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경제정책 전반이 쟁점으로 부각
  - 근로조건 상향평준화 요구로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
- 산별 노조가 요구관철을 위하여 대규모의 총파업, 동조 파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가능성
  - 기업 지부는 산별 노조의 파업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기업 실정과 무관한 파업이 발생할 우려

### □ 산업·기업 차원의 중층적인 교섭구조가 전개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

- 각 산별 노조마다 통일교섭<sup>16)</sup>·대각선 교섭<sup>17)</sup>·기업별 교섭을 병행하는 복잡한 교섭 형태가 전개
- 교섭 사안에 대한 산업·기업간 구분이 모호하여 기업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교섭해야 하는 부담
  - 유럽의 경우 법률 또는 관행에 의해 상하 단체간 교섭사안을 구분

### □ 노사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산별 노조 대응에 애로

- 산별 노조의 전문 노동운동가가 참여하는 교섭에 전문지식이나 노사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별기업은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전문적인 사용자 단체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교섭이 난항을 겪거나 불필요한 갈등관계가 지속될 위험 상존

<sup>16)</sup> 산별노조 중앙본부와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 대표들간의 교섭

<sup>17)</sup> 산별노조 중앙본부와 개별기업간의 교섭

## 7. 기업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력 가중

### '좋은 기업(good company)'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공식화·명시화 되는 추세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ISO 26000을 2008년까지 제정,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한국정부도 법안 준비를 통해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안'도 금년 7월부터 시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경영활동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부각

- 국민의 기업 호감도 조사에서 투명경영,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관련 항목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sup>18)</sup>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내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원)

	1998	2000	2002	2004	2005
사회공헌지출	3,327	7,061	10,866	12,284	14,025

자료 : 전경련, "2005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6. 8.

<sup>18)</sup>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2003년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기업에 호감을 갖게 하는 요인 중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이 약 51%를 차지

## 이해관계자의 全方位 압력 증대

- 글로벌 펀드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강도 높게 개입하는 '펀드 자본주의'가 확산
  - 소버린(SK), 아이칸(KT&G)의 사례와 같은 외국계 펀드에 의한 국내 기업 경영개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도 간접투자 활성화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경영개입 사례도 증가
    - 이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문투자펀드 등장
  
- 일반 주주들의 집단적 영향력행사 가능성도 증대
  -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예정된 '증권 집단소송제도'<sup>19)</sup>를 통한 소액투자자의 영향력 강화도 기업에 부담요소
    - 이중대표소송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의 향방도 변수
  
- 소비자 집단 역시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부상
  -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폭 강화
  - 정부도 소비자 주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강화
    -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이와 관련해 2008년 1월부터 '소비자 단체소송제도'<sup>20)</sup>가 도입될 예정

<sup>19)</sup> 상장 및 등록기업의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나머지 투자자도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sup>20)</sup> 제품의 안전, 표시, 광고 등 5개 분야에서 50명 이상의 피해가 일어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직접 해당사업자를 상대로 판매와 유통 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8. 사회전반의 '안전 회귀 성향' 강화

### 불안 속 생계안정 추구

#### □ 경제성장 둔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심화

- 평균연령은 상승하였으나 직장 내 경쟁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단축
  - 2006년 6월 현재 55~79세의 고령자 중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경우는 12%에 불과<sup>21)</sup>
- 저성장 기조 속에 일자리 창출은 제한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 사교육비 증가 등 불안요인이 가중
  -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도 가계의 불안 요인<sup>22)</sup>

#### □ 노후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강화

- 직장 선택 시 명성과 높은 연봉보다는 고용안정성과 노후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
  - 2006년 취업 준비자 53만 명 중 40.6%인 22만 명이 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sup>23)</sup>
- 사기업에 근무 중인 30~40대 직장인이 공기업, 교사,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직장인 공시족(公試族)'이 증가
  - 한국전력공사의 2006년 상반기 신입 공채 140명 중 38명, 대한주택공사의 2004년 이후 입사자 652명 중 300명이 직장인 출신

<sup>21)</sup> 통계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6

<sup>22)</sup>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2003년 3월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도 추가 상승될 가능성

<sup>23)</sup>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6

## 실리위주의 소비 트렌드 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실리위주의 소비트렌드가 확산

- 제품 정보력이 뛰어나고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 유행을 따라가는 과시형 소비에서 벗어나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가격을 중시
- 기능과 품질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20~30% 싼 유통업체의 PB (private brand)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 대두
  - 대형 할인점의 경우 PB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sup>24)</sup>

□ IT부문에서는 디버전스(divergence)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전망

- 비싸고 사용이 어려운 첨단복합제품보다는 핵심기능에 충실한 단순제품을 찾는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
- 제품 하나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에서 벗어나 단일 기능에 충실한 디버전스 제품이 각광
  - 컨버전스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가전·휴대전화·MP3 플레이어 등을 중심으로 디버전스 추세가 확산
- 부유층이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등 전통적 시장주도층에 집중되었던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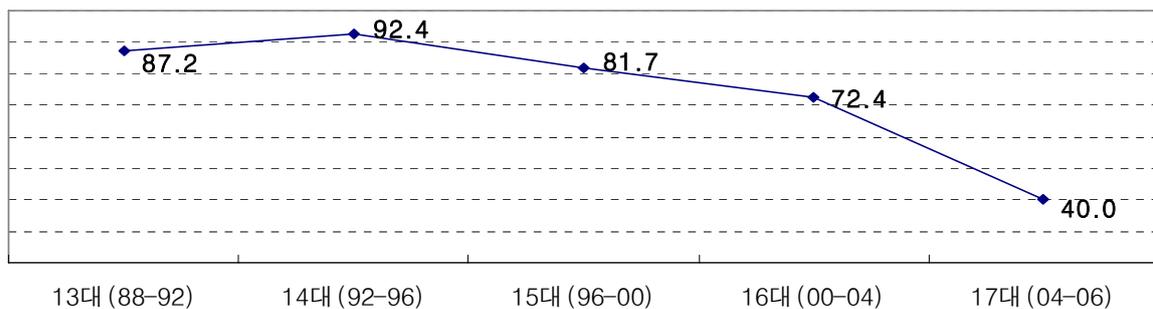
<sup>24)</sup> 이마트의 경우 2005년 PB상품 매출이 8,900억으로 2002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홈플러스는 PB 상품 매출 비중이 2001년 1%에서 2005년 15.5%로 증가

## 9.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 '정치적 季節'로의 전환과 정책현안의 교착

- 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19)를 향한 정치일정이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
  - 신년 초부터 대선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정책 아이디어 경쟁이 본격화
    - 부동산, 한미 FTA, 양극화, 대기업 정책, 북핵 문제, 청년실업 등 정책 쟁점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이 첨예화
  - 참여정부 마지막 재·보선(4.25)을 계기로 정치적 대립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
    - 정계 개편의 중심이 드러나고, 새로운 인물 영입 경쟁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격화
-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리더십 균열
  - 경제·사회적 의제의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정치권의 합종연횡 과정에서 정책조정시스템이 약화되고, 행정부와 국회간의 협조관계도 약화되어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추이(%)



자료: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선전의 가열 속에서 사회갈등 격화

-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
  - 대선 경쟁이 진행되면서 실용주의적 정책 경쟁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대결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
  - 이념·지역·계층 등 전통적 갈등 축에 환경,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새로운 갈등 축이 추가된 복합적 사회갈등 표출
  - 남북관계의 변동, 미국과 관련된 정책현안이 선거 쟁점화하면서 국론이 분열
  - 남북 정상회담, 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체결 등이 핫 이슈로 부상
- 정국 변동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들은 갈등 제어에 한계를 노정
  -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은 처리를 유보하거나 차기 정권으로 이월할 가능성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에 의거한 갈등관리 시스템의 정착에도 애로 발생
- 중앙정부 조정기능이 제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심화될 조짐
  - 2006년 민선 4기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단체장들의 행정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있는 상황
  - 국토개조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이슈가 부상하면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관련된 복합적인 갈등구조 형성

## 10.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증

### '북핵 불용' 과 '핵 보유국' 입장의 충돌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의 난항이 예상

-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해제는 물론 유엔대북 제재 해제가 핵 관련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을 고수
- 미국은 BDA의 일부 합법계좌의 동결해제로 대응하지만 북한은 전면 해제를 요구
- 북핵 관련 대화가 시작될 경우, 북한은 핵 군축 문제를 제기
- 6자회담을 4(북한을 포함한 핵무기보유국)+ 2(한국,일본)의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접근
- '북핵 불용'을 주장하는 미국 등 5개국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6자회담의 전망은 비관적

#### 북한의 핵군축 주장의 핵심사항

- ▷ 한반도의 '비핵무기대화'를 유도하여 핵우산으로 연결된 한미군사동맹을 무의미하게 만드려는 의도
- ▷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도 핵을 통해 견제하는 효과

□ 북한이 추가적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

- 6자 회담이 사실상의 결렬 상태에 빠지면 대화거부,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과시
- 미국, 일본은 유엔헌장 7장(군사 및 경제제재 포함)에 근거하여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고 시도하지만 한국 및 중국과 갈등 발생

## 흔들리기 시작하는 북한체제

### □ 북핵 해결을 위한 주변 4강은 '북한체제 흔들기'를 본격화

-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 대북제재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북핵 불용'이라는 점에 상호 이해 일치
  - 부시 행정부는 '채찍'을 선택하고 중국은 표면적으로 대화를 유지하지만 원유 및 식량 공급 중단, 금융거래 제한 등의 대북경제제재를 시행
-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주일미군의 군사시설을 보강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견제하는 명분으로 일본의 자마(座間) 기지는 물론 주일미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기지를 강화
-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양국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

### □ '대북 압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사이에서 한국정부의 딜레마 심화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을 자제토록 요청하고 대북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미온적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 민간차원의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도 위축

### □ 북한은 식량난 심화로 접경지역의 탈북 현상이 증가하지만,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기를 독려

-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북한 사회 내에 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점차 확산

##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lt; 금융동향 &gt;

	12. 22	12. 26	12. 27	12. 28	12. 29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28.3	929.9	930.5	929.8	-
	엔/달러(뉴욕시장)	118.34	118.76	119.18	118.73	118.9
금리	회사채(3년AA-, %)	5.23	5.31	5.30	5.29	5.29
	국고채(3년, %)	4.85	4.94	4.93	4.92	4.92
주가지수(KOSPI, 종가)	1,437.5	1,433.9	1,425.1	1,434.5	-	

## &lt; 실물동향 &gt;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8월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sup>1)</sup>	4.7	4.0	4.8	..	..	..	..
민간소비	-0.3	3.2	4.0	..	..	..	..
설비투자	3.8	5.1	9.9	..	..	..	..
산업생산 증가율	10.2	6.3	10.9	16.5	4.5	6.3	..
평균가동률	80.4	79.8	80.7	84.1	81.5	82.4	..
실업률	3.7	3.7	3.4	3.2	3.3	3.2	..
실업자(만명)	86.0	88.7	80.7	76.6	78.9	76.8	..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3	0.03	0.04	0.03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9	2.4	2.1	2.2	2.1
수출(억달러, FOB) <sup>2)</sup>	2,538.5	2,844.2	273.0	296.7	280.9	306.6	..
(증감률)	(31.0)	(12.0)	(17.0)	(21.3)	(10.8)	(18.7)	..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70.4	277.1	256.4	267.6	..
(증감률)	(25.5)	(16.4)	(22.9)	(22.0)	(13.2)	(12.2)	..
경상수지(억달러)	281.7	149.8	-6.4	14.1	17.6	42.4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270.2	2,282.2	2,294.6	2,342.6	..
총대외지불부담 <sup>3)</sup> (억달러)	1,722	1,898	2,494	..	..	..	..

1) 한국은행 2006년 12월 1일자 '200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